



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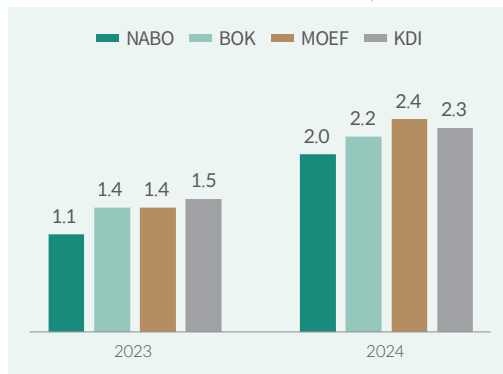
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우 분석관

2023~2027 한국경제 전망

-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~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가 연평균 2.2% 성장할 것으로 전망
 - 2023년 한국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, 물가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.1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 - 향후 잠재성장률이 2%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실질GDP 성장률은 2023년을 저점으로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으로 예상

[그림 1] 주요 기관의 한국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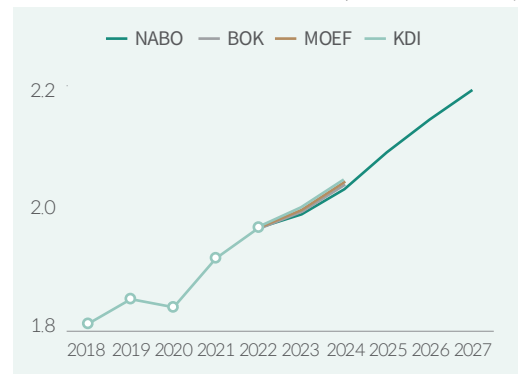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대비, %)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('23.10월), 한국은행('23.8월), 기획재정부('23.7월), KDI('23.8월)

[그림 2] 실질GDP 성장경로(2023~2027)

(단위: 실질GDP, 천조원)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2023~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는 민간[수요측면]과 기타생산성²⁾[공급측면]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전망

-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상회할 전망
- 공급측면에서는 기타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전망

1) 2023년 11월 1일 「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」을 주제로 개최된 국회예산정책처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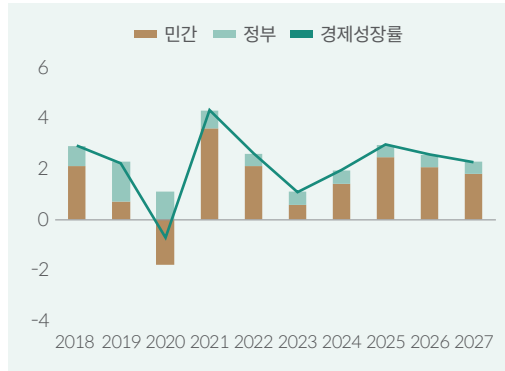
2) 국내총생산의 변화 중 노동과 자본의 투입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총요소생산성으로 분류된다.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에는 기술혁신, 제도 개선, 국민의 교육 수준 향상 등 생산성과 연관된 요소뿐만 아니라 대외여건, 경제주체의 심리 등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. 이에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에서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 대신 기타생산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(「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: 성장부문」, p10 참조).



- 자본스톡의 증가율 둔화로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
-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로 노동의 마이너스(-)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[그림 3] 수요측면 성장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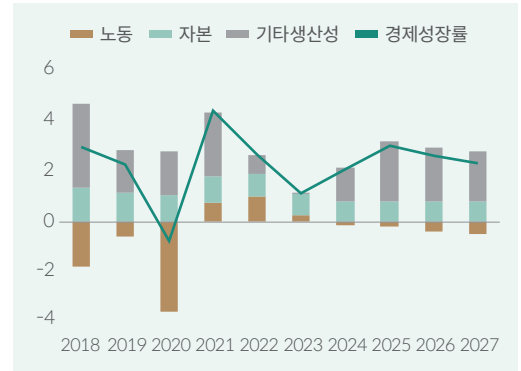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%p)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한국은행

[그림 4] 공급측면 성장기여도

(단위: %,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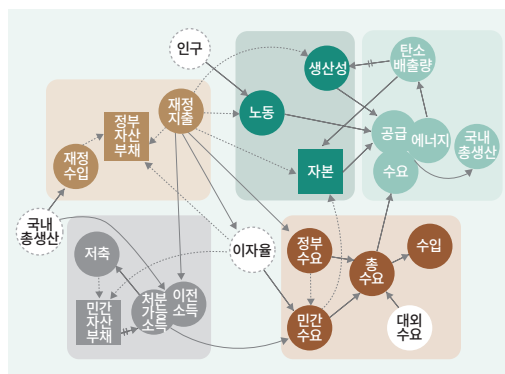
주: 노동=취업자수×노동시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한국은행

정책개입 필요성 점검

■ 성장경로, 공급,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

- (성장경로) 생산성 둔화, 노동 공급 위축, 소득 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
- 재정지출 효과의 파급경로(민간수요에 미치는 영향, 이자율과의 관계, 이전소득 효과 등) 또한 약화될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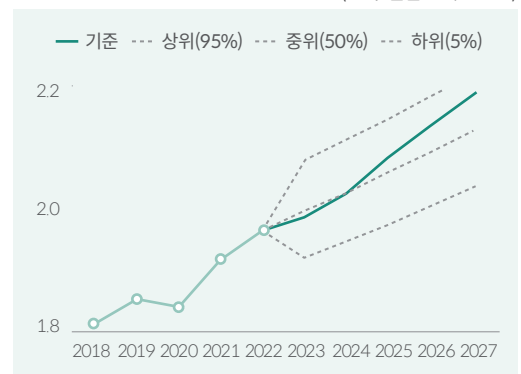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국민경제 시스템 구성도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그림 6] 한국경제의 향후 성장경로 범위

(단위: 실질GDP, 천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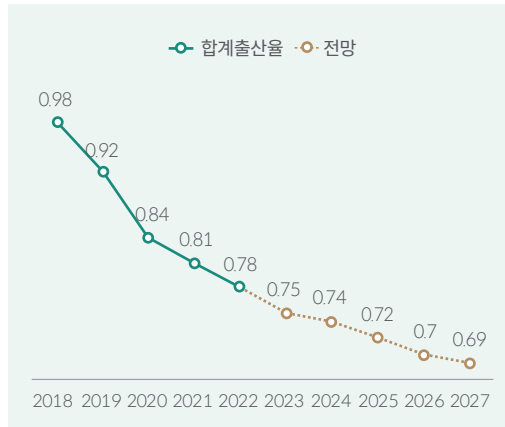


주: 실질GDP 기준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공급: 노동) 저출산·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
- (공급: 자본)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존 자본스톡 중 일부가 저탄소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 증가세가 둔화될 위험
- 탄소중립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연계됨에 따라 국내 산업(철강, 석유화학, 반도체 등)의 수출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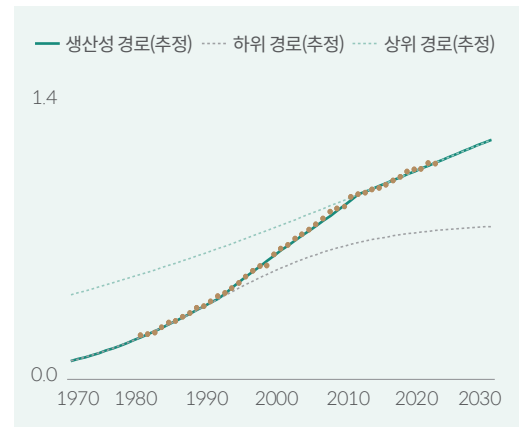
- (공급: 생산성)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상위 경로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현 경로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
 - 기존 경로에 대한 락인(lock-in) 효과 크기에 따라 중장기 경로 전환 성공 확률이 달라질 수 있음
- (수요: 소득) 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내수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

[그림 7] 합계출산율 전망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통계청

[그림 8] 한국경제의 생산성 경로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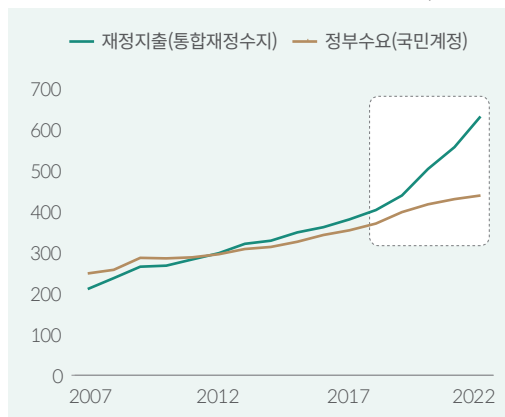
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

■ 정책 집행 시 재정지출(통합재정수지)과 정부수요(국민계정) 사이의 연관성 약화 가능성 고려

- 최근 들어 국민계정 상 정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지출(이전지출)이 증가하면서 양자 간 연관성이 약화
 - 집행시차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경기대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지출의 효과를 개선할 필요성

[그림 9] 재정지출(통합재정수지)과 정부수요(국민계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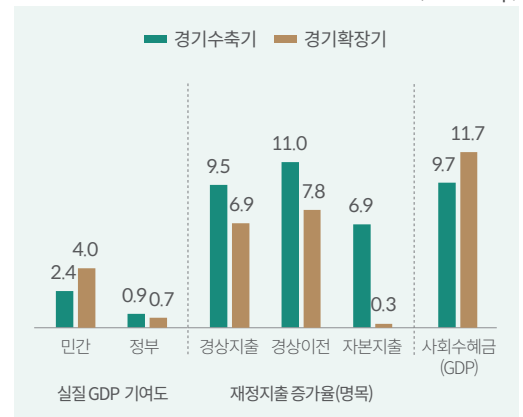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원)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한국은행

[그림 10] 정부부문 성장기여도와 재정지출증가율

(단위: %, %p)



주: 23개년(2000~2022), 수축기(14개년), 확장기(9개년)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한국은행

▪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통화-재정 정책조합 고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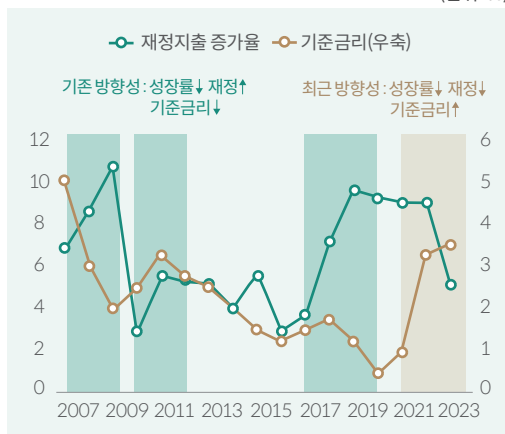
-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재정-통화정책 조합은 '재정지출 확대-기준금리 하락'의 방향성을 나타냄
- 그러나 최근에는 '재정지출 축소-기준금리 인상'의 정책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음
- 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-재정 정책조합이 필요

▪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(time consistency) 유지

- 경기수축기(확장기)에 재정책장(긴축)이 이루어지리라는 민간부문의 기대 형성 여부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
- 중기 재정목표와 재정기조를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의 신뢰 구축 도모

[그림 11] 경제성장률과 재정-통화정책 방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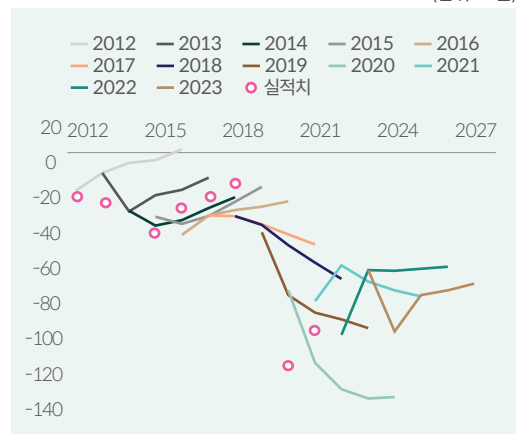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

[그림 12]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및 실적치(2012~2022)

(단위: 조원)



자료: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시사점

▪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

-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경로에 있어 불확실성이 확대
 - 인구구조 변화, 기후변화 등은 한국경제의 공급(생산성)과 수요(소득)의 장기 경로에 영향을 미침
-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총량 증가율, 분야별 예산 배분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
 -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-편익 분석,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